



미국 :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 악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전역을 강타하면서, 연말연시 전후 미국 내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했다.¹⁾ 그와 관련해 실업 증가의 한 징후라 할 수 있는 최초 실업수당 신청이 1월 9~15일 29만 건에 달했고(전주대비 5만 9천 건 증가), 그다음 주인 1월 16~22일에는 다소 감소한 26만 건을 기록했다.²⁾ 이는 2021년 10월 이후 최고 수치에 해당한다. 팬데믹 기간 동안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이어져 온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덮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 등 의료시설의 경우, 진료 수요 증가로 인해 근무 여건이 악화된 데다 직원 감염이 증가하면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브루클린 소재 인터페이스 메디컬 센터(Interfaith Medical Center)의 CEO인 라레이 브라

운(LaRay Brown)에 따르면, 2022년 1월 초 전체 직원의 7%에 해당하는 350여 명이 결근했는데, 최근 들어 그 수가 더욱 증가했다고 한다.

오미크론으로 인해 여러 소매점이 영업 시간을 단축하고 일시적으로 매장을 폐쇄하거나, 입고 지연 사태 등과 관련해 고객에게 사과 편지를 발송하고 있다.³⁾ 치폴레 등 전국 단위의 패스트푸드 매장들도 인력 부족 매장에 한해 앱 주문을 차단하고 매장 내 주문에만 집중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상품 출하가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마트 진열대가 비어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2020년 팬데믹 초기의 양상과 얼핏 비슷하지만, 정부의 강제 조치가 아닌 노동력 부족 및 공급망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1) Rosenberg, E.(2022), "Workers Are Out Sick in Record Numbers, Exacerbating Labor Shortage Woes", *The Washington Post*, January 20, <https://www.washingtonpost.com> (검색일 : 2022.1.22).
- 2) U.S. Department of Labor(2022), "Unemployment Insurance Weekly Claims (Seasonally Adjusted Data)", <https://www.dol.gov> (검색일 : 2022.2.1).
- 3) Repko, M.(2022), "Apology Notes, Store Closures and Reduced Hours : Here's How Retailers Are Handling Omicron Surges", *CNBC*, January 7, <https://www.cnbc.com> (검색일 : 2022.1.22).

미국 : 브로드웨이 제작자와 노조 간 갈등 심화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2021년 말 18개의 작품 공연이 취소되는 등 브로드웨이 연극계에 한파가 불어오는 가운데, 최근 공연 취소 방식을 놓고 제작자와 노조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유명 제작자

케빈 맥콜럼(Kevin McCollum)이 미세스 다웃파이어(Mrs. Doubtfire) 공연을 취소하는 결정을 노조의 동의 없이 진행한 것이다.¹⁾ 맥콜럼은 티켓 수익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2022년 3월 15일



까지 공연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노조와 맺은 합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브로드웨이 제작사와 뉴욕시 음악인 노조(The NYC Musicians Union)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실제 금전적 손실을 증명하고 노조 승인을 얻는 전제 하에 제작사는 1, 2, 9월에 한해 최대 8주간 공연을 연기할 수 있지만, 노조는 맥콜럼이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작사가 금전적 상황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노조 승인을 통한 공연 중단이 아니라 독단적인 중단을 택했다는 것이다. 뉴욕시 음악인 노조의 티노 갈리아디(Tino Gagliardi)는 브로드웨이 계약에 따르면 모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관객에게 공연 복귀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공연 중단이 진행되지만, 일부 제작자가 자신들의 금전적 상황을 숨기기 위해 이 방식을 따르지 않는 대신 막연한 재개 약속과 함께 공연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다고 비판했다. 브로드웨이 배우 노조의 메리 맥콜(Mary McCall)은 제작자가 티켓 판매실적이 저조한 겨울을 피해 공연을 연기하는 문제는 팬데믹 이전부터 있어 왔으며, 맥콜럼 등의 제작자들이 오미크론을 핑계로 새로운 비용 절감 도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 대변인은 각기 다른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복수노조들과의 통일된 협약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3월 연극 재개에 맞춰 복귀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맥콜럼은 이번 공연 중단이 향후 장기 고용을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노조들에 의하면 공연의 3월 재개와 기존 노동자의 잔류 모두 보장되지 않으며, 맥콜럼의 구두 결정에는 어떠한 강제조항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맥콜럼은 자신의 구두 결정을 문서화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공연 취소 기간 동안 총 115명이 최소 9주간 해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1년 이상 실직 상태에 있었던 이들에게는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공연 재개 시 노조는 계약 관련 재협상을 해야 하고 이는 더 낮은 출연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브로드웨이 노동자의 건강보험이 근로하는 주수를 기준으로 설계된 데다, 많은 노동자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은 이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1) Aldana, R. W.(2022), "A New Labor Battle Opens on Broadway as Omicron Closes Theater Shows", CNBC, January 14, <https://www.cnbc.com> (검색일 : 2022.1.23).

미국 : 스타벅스 노조 조직화 확산¹⁾

미국 스타벅스의 노조 조직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각지에 있는 스타벅스 지점들의 바리

스타들이 온라인 미팅,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노조 결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지점 중 최초로 노조

결성을 이루어낸 버팔로 지점의 직원들로부터 조연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 따르면, 스타벅스 노동자 연합(Starbucks Workers United)이라고 불리는 단체를 중심으로 시카고, 보스턴, 클리블랜드, 시애틀을 비롯한 전국 각 도시의 스타벅스 지점으로부터 노조 선거 청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스타벅스 전체의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버팔로 지점의 조직화가 스타벅스 체인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스타벅스 본사는 노조 조직화 운동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관리자들을 현장에 직접 파견하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즉각 대응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들은 종종 지점을 잠시 닫고 별도의 공청회를 열어 회사의 노조에 대한 방침을 교육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는 2022년 여름까지 시급을 17달러로 인상할 것이며 앞으로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할 예정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스타벅스 노조 조직화는 최근 업스테이트 뉴욕 노동자 연합(Workers United Upstate New York Union)이 추진한 커피 체인 조직화 운동의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이 연합은 뉴욕주 이타카(Ithaca)시에 소재한 김미 커피(Gimme Coffee), 버팔로시의 스폿 커피(SPoT Coffee)와 같은 로컬 커피 체인의 노조 결성을 추진한 바 있다.

1) Haddon, H. and A. Prang(2021), "More Starbucks Baristas Across the U.S. Are Looking to Unionize", *The Wall Street Journal*, January 1, <https://www.wsj.com> (검색일: 2021.1.24).

미국 : 연방 노동 기관들, 노동 관련 규약 위반에 관한 정보 공유 협력¹⁾

미국 노동부의 근로감독국(Wage Hour Division: WHD)과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사용자의 각종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정보 공유에 관한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 이 협약을 통해 두 부처는 사용자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독립 계약자 오분류,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보복 행위 등과 같은 건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업무 협약은 즉시 발효되며, 근로감독국이 현재 입수한 사례들을 검토한 다음, NLRB의 업무 소관과 겹치는 것이 없는지 판단한 후에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노동부는 공정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최저임금과 초과노동 관련 사안에, NLRB는 전국노동관계법을 바탕으로 노조를 결성할 권리 및 발언권 등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이 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여, 현장에서 사용자들은 종종 이 두 가지 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또 노동자들이 사용



자를 고소할 경우, 사용자들이 이에 보복 행위를 하거나 기업 수준에서의 협력 활동을 통하여 노동자들을 억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노동부 근로감독국의 제시카 루만(Jessica

Looman)은 앞으로 노동부와 NLRB 간의 공식적인 협력 과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 Rainey, R. and I. Kullgren(2022), "U.S. Labor Agencies Strike Deal to Share Enforcement Information", *Bloomberg Law*, January 6, <https://news.bloomberglaw.com> (검색일 : 2021.1.24).

미국 : 민주당 전국 위원회 노조 조직화¹⁾

민주당 전국 위원회의 직원들은 2022년 1월 4일 전체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로 노조를 결성하였으며 이들은 국제 서비스 노동자 조합(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에 가입하였다. SEIU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위원회 직원 앨리슨 고(Alison Goh)는 "우리는 SEIU의 Local 500에 가입하고, 우리의 일터에 민주적 가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국 위원회에 노조가 생기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그간 정당 직원들은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으며, 특히 캠페인 시즌에 더욱 심한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이 외에도 성희롱, 미흡한 복지, 차별 등과 같은 사업장 내 문제들 역시 위원회 내에 존재했다. 여태까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공식적인 불만 제기는 당의 대의를 위해서 덮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성차별 문제, 인종 문제들이 가시화되면서, 위원회 직원들 역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간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민주당의 전반적인 친노조 기조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당 내부의 노조 결성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노조 설립을 지지하는 직원이 3분의 2가 넘었고 이에 위원회 관리자들도 역시 노조를 자발적으로 승인했다. 특이하게도 득표 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NLRB를 통하지 않고 메릴랜드주 민주당 하원의원 도나 에드워즈(Donna Edwards)를 외부 위원으로 초대했다. 관리자와 직원 측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노조 조직화는 내부적인 노사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으나, 민주당 전국 위원회의 경우 굉장히 상호협력적(collegial)이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1) Seitz-Wald, A.(2022),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Staff Votes to Unionize", *NBC News*, January 4, <https://www.nbcnews.com> (검색일 : 2021.1.24).

미국 : 연방 최저임금 인상¹⁾

2022년 1월 21일 미국 인력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의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공무원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2022년 초까지 연방 계약 노동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인력관리처는 각 부처로 하여금 1월 30일까지 임금을 인상하도록 진

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인상은 총 220만 명의 연방 노동자 가운데 6만 7천 명의 임금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들 중 5만 6천 명은 국방부, 나머지는 농무부나 보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미국 우정공사와 우편규제위원회(the Postal Regulatory Commission)는 인력관리처의 권한 밖이기에 임금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1) Reinicke, C.(2021), "Biden's \$15 Minimum Wage Hike for Federal Agencies is Now in Effect", *CNBC*, January 21, <https://www.cnbc.com> (검색일 : 2021.1.24).

독일 : 연방노동사회부 장관, 팬데믹 종식 이후의 지속적 재택근무권 법제화 추진

후베르투스 하일(Hubertus Heil) 연방노동사회부 장관은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독일 노동환경의 일상으로 정착시키고자 한다. 그는 언론사 데페아(dp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코로나 19로 인해 예기치 않게 진행된 대규모의 재택근무 실험을 통하여 독일 노동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라며, 새로 구성된 신호등 연정은 모바일 오피스를 가능하게 하는 현대적인 원칙을 마련하고 재택근무가 지속적으로 독일 노동 환경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일 장관의 계획은 노동자의 재택근무 요청 권리를 법제화하여 노동자가 반드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택근무

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사용자는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자의 재택근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하일 장관은 모바일 오피스가 많은 노동자에게 더 나은 일가정 양립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이는 새로운 자유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시적 재택근무가 아니라 간헐적 재택근무만을 원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더 유연한 근무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사용자들은 지속적 재택근무권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독일연방사용자단체총연맹의 슈테펜 캠페터(Steffen Kampeter) 회장은 원격 근무와 재택근무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며 하일 장관의 계획이 노동환경의 발전 양상을 관료제



적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라고 비판했고, 노동환경의 유동성은 우선 노동시간 유연화를 통해 지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호등 연정이 연정 협정에서 재택근무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 아니라 논의

권만을 제시하고 있었다며, 연정 협약의 내용과 정당의 입장 사이에서 연정 내부에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¹⁾

1) Tagesschau(2022), "Heil will dauerhaften Anspruch auf Homeoffice", Januar 12, <https://www.tagesschau.de> (검색일: 2022.1.19).

독일 : 통일 30년 이후에도 구 동서독의 임금격차 여전

연방의회 내 좌파당 교섭단체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동서독 통일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구 동독지역 노동자가 구 서독지역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구 서독지역과 베를린 지역의 2021년 3분기 특별임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은 세전 4,237유로였으나 구 동독지역의 5개 주에서는 세전 3,442유로에 불과했다. 특별임금을 합산할 경우 구 서독지역에서는 4,457유로, 구 동독지역에서는 3,563유로로, 2020년과 비교했을 때의 임금격차는 997유로에서 894유로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여전히 구 동독지역의 노동자가 20%가량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노동조합연맹의 분배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초고소득층은 구 서독지역인 함부르크, 헤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으며, 구 동독지역인 작센안할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튀링겐주에는 가장 적은 수가 거주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고소득층의 비율은 구 서독지역에서

8.6%, 구 동독지역에서 5%를 차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구 동독지역의 생활 물가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 구매력의 격차는 임금격차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 역시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고 본다.

구 동서독의 임금격차는 산업 부문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조합협회에 의하면 교육 및 공공행정부문에서는 구 동독지역 노동자의 임금이 구 서독지역 노동자 임금의 98%에 달해 큰 차이가 없었으나, 상업에서는 74.9%, 정보통신업에서는 79%, 건축업에서는 82.2% 정도에 머물러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임금격차의 원인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노동조합연맹은 특히 구 동독지역 자치단체의 높은 부채 수준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필요한 기간 시설이 구축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구 동독지역에서 임금요율표에 따르는 비율이 45%에 불과해 구 서독지역의 56%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인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보인다.

좌파당 원내대표인 디트마 바취(Dietmar Bartsch)는 “구 동독지역의 모든 주가 구 서독지역의 그 어떤 후보보다도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월 900유로에 이르는 임금격차는 중대한 문제다.”라

며, 연방정부로 하여금 임금격차로 인한 노동시장 분열 문제를 2025년까지 해결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¹⁾

1) Zeit/dpa(2022), “Lohnlücke zwischen Ost und West schwindet nur langsam”, *Zeit*, Januar 14, <https://www.zeit.de> (검색일 : 2022.1.19).

독일 : 2021년 12월 노동시간단축지원금 수령자 수 다시 증가 예상

독일 ifo경제연구소는 아직 연방노동청의 최종 집계 발표되지 않은 2021년 10월 이후의 노동시간단축지원금 수령자 현황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와 연방노동청의 자료에 기초하여 노동시간단축지원금 수령자 추정치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2월의 노동시간단축지원금 수령자 수는 전월(2021년 11월)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21년 11월의 노동시간단축지원금 수령자 수는 약 71만 2천 명 수준까지 감소하겠지만, 12월에는 약 16만 7천 명 정도가 다시 증가하여 약 87만 9천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이러한 예측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노동시간단축지원금을 수령한 노동자의 비율은 11월의 약 2.1%에서 12월에는 약 2.6%로 증가하게 된다. 연구를 담당한 ifo경제연구소의 세바스찬 링크(Sebastian Link) 박

사에 따르면 요식 및 숙박업과 소매업에서 노동시간단축지원금 수령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21년 11월에 비해 12월에 노동시간단축지원금 수령자 수가 크게 증가한 요식 및 숙박업의 경우에는 약 7만 5천 명에서 약 12만 6천 명으로, 소매업의 경우에는 약 2만 3천 명에서 약 5만 3천 명으로 관련 수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노동시간단축지원금 수령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체 수령자의 약 17.6%인 약 16만 6천 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단축지원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제조업 전체로는 코로나 19로 인한 물류 적체의 영향으로 노동시간단축지원금 수령자 수가 약 38만 천 명에서 약 3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¹⁾

1) ifo institut(2022), “Kurzarbeit steigt in Deutschland”, 언론보도용 자료, 12 Janur, <https://www.ifo.de> (검색일 : 2022.1.25).



독일 : 요식업 분야 취업자 수 현저히 감소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은 특히 요식업 분야의 고용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요식업 분야 취업자 현황에 대한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약 11.6%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전인 2019년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무려 약 23.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봉쇄조치가 처음 시행된 2020년 초부터 요식업 분야의 취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부의 대응 정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요식업 분야 중에서도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하여 고용상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은 술집이나 선술집 등이다.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업종에서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약 4분의 1(23.6%) 감소하였으며, 2019년 동기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44.7%) 감소하였다. 상대적으로 레스토랑, 스넥바,

카페 등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요식업 분야는 2021년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약 9.1%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만 명 이상(약 107만 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는 주요 산업에 해당한다. 특히 저임금 고용이 활성화된 분야여서 코로나19 위기 발생 초기에 해당하는 2020년에는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이 크게 감소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요식업 분야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 수는 지난 2019년 약 45만 명 수준에서 2020년에는 약 38만 명으로 약 15.5% 감소하였다.

요식업 분야의 취업자 수 감소는 직업 교육생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9년에 비해 2020년 들어 요식업 분야에 속한 각 직종에서의 신규 직업교육 노동계약 체결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요리사는 약 5분의 1 정도(19.8%) 감소하였고, 레스토랑 매니저의 경우에도 약 21.9% 감소하였다.¹⁾

1) Statistisches Bundesamt(Destatis)(2022), "Corona-Krise : Zahl der Beschäftigten in der Gastronomie geht deutlich zurück", 14 Janur, <https://www.destatis.de> (검색일 : 2022.1.25).

영국 : 런던 소재 NHS 병원, 2021년 3,600만 파운드 규모의 의료서비스 영리기업에 위탁한 것으로 밝혀져

런던 소재 NHS 병원들이 2021년 한 해 동안 민간 기업 HCA에 3,600만 파운드 상당의 의료서비

스 제공을 위탁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민간 싱크탱크 건강 및 공익센터(Centre for Health

and the Public Interest: CHPI)에 따르면, 영리기업 HCA는 주로 암, 심장 치료 관련 서비스를 위탁 제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NHS 병원이 무릎, 엉덩이 수술과 같은 간단한 수술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치료를 영리부문에 이처럼 대규모로 위탁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¹⁾

공공 의료서비스의 대명사인 잉글랜드 NHS 병원들이 민간에 서비스 제공을 위탁하는 기저에는 코로나19로 인한 NHS 인력 부족 및 업무 지연 문제가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CHPI의 추가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후 민간 의료기관으로 전달된 NHS 예산 규모는 20억 파운드를 초과한다.

NHS 병원 치료 대기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NHS 병원들이 위급한 환자들의 치료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뉴캐슬대학교 공중보건학과 알리슨 폴록(Allyson Pollock) 교수는 “코로나19가 NHS 서비스 축소와 민간의료서비스 확대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관련 재원이 NHS의 직원 확충, 장비 구매 및 서비스 확대에 지출되었다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1) Kollewe, J.(2022), “London NHS Hospitals Bought £36m of Services from US Healthcare Firm HCA Last Year”, *The Guardian*, January 21, <https://www.theguardian.com> (검색일: 2022.1.23).

영국: 이케아, 백신 미접종 자가격리 직원에게 감액된 상병수당 지급 결정

이케아(Ikea)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이 자가격리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할 경우, 법정 최저 상병수당인 주당 96.35파운드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백신을 접종한 자나 임신 등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상병수당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

이케아의 이 같은 상병수당 제도는 직원들의 대규모 결근 및 인건비 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회

사 차원의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실제 2021년 12월부터 잉글랜드에서는 자가격리 지침이 완화되어 백신 접종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을 하더라도 더 이상 자가격리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단, 미접종자의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 시 여전히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의류업체인 NEXT, 온라인 식품업체인 Ocado 등 다른 잉글랜드 소재 유통 업체들에서도 이케아와 유사한 차별적인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양상이 관측되고 있다.



- 1) Hotten, R.(2022), "Ikea Cuts Sick Pay for Unvaccinated Staff Forced to Self-isolate", *BBC*, January 11, <https://www.bbc.co.uk> (검색일 : 2022.1.24); Timmins, B.(2022), "Ocado and Next Cut Sick Pay for Unvaccinated Isolating Staff", *BBC*, January 13, <https://www.bbc.co.uk> (검색일 : 2022.1.24).

프랑스 : 의료계 종사자, 임금인상 요구하며 파업 단행

최근 의료계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내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한 임금인상이 갈등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올리비에 베랑(Olivier Véran)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로 타격을 입은 병원과 요양원 직원에 한하여 월 평균 183유로의 급여인상 조치를 발표한 바 있는데, 당시 장관은 동종 분야에 종사하는 비의료 직원도 동일한 임금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기로 약속했었다. 비의료 직원은 병원과 의료기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 전반을 가리키는데, 이를테면 의료 관련 전문가, 사회복지사, 행정직원 및 기술자가 이러한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논의단계에만 머물면서, 2022년 1월 18일 의료계 종사자 노조단체는 평등한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규모 파업을 강행했다.

파업 전날인 1월 17일, 프랑스민주노동총연맹(CFDT), 노동자의 힘(FO), 전국자율노조연합(UNSA) 등 세 노조단체는 파업을 결의하면서 병원을 비롯한 지역 공공서비스 또는 민간부문에서 근무하는 의료계 종사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는 이번 파업이 약 45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르는 의료계 종사자의 임금인상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디디에 비리그(Didier Birig) 노동자의 힘 위원장은 해당 의료계 종사자의 임금인상은 아직 최소한의 성과조차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 책정을 요구했다. 또한 나탈리 팡(Nathalie Pain) 프랑스민주노동총연맹 위원은 동일한 시설 또는 동종 서비스 노동자 간 차별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¹⁾며 이번 파업의 뜻을 밝혔다.

2021년 11월, 장 카스테스(Jean Castex) 총리는 사회복지 및 의료계 노동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조와 단체교섭을 2022년 1월 15일에 진행하기로 했으나, 해당 날짜를 앞두고 새 교섭일을 정하지 않은 채 교섭을 연기하면서 노조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에 항의하며 노조는 파업을 감행하기로 결정했고, 정부 대변인은 뒤늦게 오는 2월 18일에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1) Le Monde(2022), "Les salariés du médico-social revendiquent des hausses de salaire et appellent à

la grève”, le 18 janvier, <https://www.lemonde.fr> (검색일 : 2022.1.19).

프랑스 : 2021년 한 해 동안 약 100만 개의 기업 창업, 역대 최고치 기록

2022년 1월 17일, 브뤼노 르메르(Bruno Le Maire) 경제부 장관은 2021년에 약 100만 개의 기업이 국내에 새로 설립되어, 한 해 동안 창업된 기업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공개된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역시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는데, 해당 연도에 약 85만 개의 기업이 등록되었다. 그런데 이에 비해 2021년에는 그 수치가 약 17.4% 증가하였다. 반면 장관이 공개한 프랑스 통계청(INSEE)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위와 같은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비즈니스 창출 증가분의 약 3분의 2가 소액자본사업가 부문에 해당하며, 이를 제외할 경우 2021년에 설립된 기업 수는 약 35만여 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액자본사업가(microentrepreneur)는 지난 2009년 당시 사르코지 정부 주도 정책으로 창설된 소규모 자영업자 제도를 근간으로 하며, 2014년에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다년간 프랑스 내 창업 인구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현 제도를 통해 정부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독립노동자를 사회보장체계에 포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간소화된 방법으로 사회 및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이 제도는 특정 금액을 초

과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VAT)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제도 가입 첫째 사회부담금을 부분적으로 감면해주는 장점을 지닌다. 2019년 말 통계청 연구에 따르면 소액자본사업가 비율은 거의 모든 산업 부문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매장이 없는 원격 형태의 소매업은 전체 소매업의 약 75%에 도달했고 택배업은 해당 부문의 98%를 점유했다.

비록 고용계약이라는 형식과 업무가 정해진 임금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지만, 현재 소액자본기업가 중 약 29%는 급여를 지급하는 겸업을 이어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규모자영업자연맹이 발표한 2021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발과 동시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약 10%의 자영업자만이 전년도 매출의 60%를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2021년 7월 공개된 프랑스 통계청 연구에 따르면, 2019년 소액자본사업가는 자영업 활동으로 월평균 590유로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밝혀졌다.¹⁾ 이와 같은 1인 기업 및 소규모 기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갈등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데, 2014년 상반기에 등록을 마친 소규모 자영업자의 3분의 1만이 현재까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1) Romain Geoffroy(2022), “Un million d’entreprises créées en 2021 en France, signe d’attractivité ou de précarité ?”, *Le Monde*, le 20 janvier, <https://www.lemonde.fr> (검색일 : 2022.1.21).



프랑스 : 감사원,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충분한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비판

프랑스 감사원은 2022년 1월 1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 정부지원금인 RSA(revenu de solidarité active) 제도가 수혜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¹⁾

RSA는 지난 2008년 기초생활수당(revenu minimum d'insertion)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정부가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 2019년 기준 정부예산 150억 유로(약 20조 3,372억 원)가 투입됐으며 210만 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²⁾ 오늘날 프랑스 전체 인구 중 15%가 해당 혜택을 받으며, 이들은 매월 1천 유로(약 135만 원) 이하로 생계를 유지한다.

감사원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 대상자의 30%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이처럼 지원 대상자 중 상당수가 제도적 율타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혜자 관리 시스템이 허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취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RSA 수혜자들 중 7년 후 일자리를 얻어 해당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3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RSA 제도를 단순화해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혜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더욱 적극적인 관리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1) Gaven, G.(2022), "Le RSA aide à sortir de la grande pauvreté mais pas assez à trouver un emploi, selon la Cour des comptes", *Franceinfo*, 13 janvier, <https://www.francetvinfo.fr> (검색일 : 2022.1.14).
2) Rey-Lefebvre, I.(2022), "Pour la Cour des comptes, le RSA ne mène pas assez à l'emploi", *Le Monde*, 13 janvier, <https://www.lemonde.fr> (검색일 : 2022.1.14).

프랑스 : 정부, 코로나19 위기로 타격받은 중소기업 대상 특별지원 약속

장 카스테스(Jean Castex) 프랑스 총리는 5차 코로나19 대유행을 억제하고자 2021년 말부터 시행된 제한조치들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체에 특별 지원을 제공한다고 지난 1월 18일 밝혔다.¹⁾

새로 도입된 지원책은 지난 12월과 1월에 걸쳐 250명 미만의 피고용인을 둔 업체 중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곳들을 대상으로 한다. 총리에 따르면 임금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지원책은 숙박업계와 식당

과 케이터링 등 요식업계, 행사 기획 및 관광업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된다. 이 같은 선정 기준을 두고 카스테스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로 여전히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기간 65% 이상의 매출액 감소를 보인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와 실업보

험료 등의 사회보장제도 분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지원책으로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 Le Nouvel Observateur(2022), “Hôtellerie, restauration, événementiel... Des aides renforcées annoncées par Jean Castex”, *L'OBS*, 18 janvier, <https://www.nouvelobs.com> (검색일: 2022.1.18).

프랑스 : 2021년 4분기 고용신고 건수 상승세 유지

의료와 노령, 가족, 산업재해 보험 등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서비스를 담당하는 URSSAF가 2022년 1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등록된 고용신고 건수는 240만 건에 달한다. 여기서 고용은 인턴을 제외한 한 달 이상 기간의 고용계약을 맺은 상태를 의미한다.¹⁾

앞서 2021년 3분기 고용신고 건수 증가율은 11%에 달하며 매우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4분기의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승세는 유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시행된 2차 국가 봉쇄가 시행됐던 2020년도 같은 분기보다는 무려 35.3% 높았다.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

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해도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정규직(CDI)은 3.6% 증가한 반면, 기간제 계약직(CDD)은 2.9%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산업별로 편차를 보였다. 20명 미만의 피고용인을 둔 영세소기업에서는 고용 건수가 1.9% 줄어든 반면, 보다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1.9% 증가한 고용 건수를 기록했다. 건설 분야는 오히려 2.7%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생산·제조업과 3차산업 분야에서는 각각 0.4%와 0.5% 소폭 상승했다.

1) URSSAF Caisse Nationale(2022), “Stat'UR no 335”, 20 janvier, <https://www.urssaf.org> (검색일: 2022.1.21).



일본 : 기시다 총리, 임금인상 촉진을 위한 감세정책 확대 시행 발표

2021년 12월 22일 일본 정부는 2022년에 시행하는 새로운 조세정책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인상 촉진을 위한 감세(賃上げ税制)」 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다. 임금인상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감세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인 이 정책은 분배 중심의 경제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 일본에서 임금인상에 따른 세금공제율은 대기업이 최대 20%, 중소기업이 25%이다. 이번 개정

에 따라 공제율은 대기업이 최대 30%, 중소기업은 40%까지 올라간다. 대기업은 노동자 급여총액의 3% 이상을, 중소기업은 1.5% 이상을 인상하면 15%의 세금 기본공제율을 적용받고, 임금인상률이나 교육훈련비 투자 등에 따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아베 정부에서도 시행되었던 정책인데, 기시다 총리는 기업에 임금인상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공제율을 더 높였다. 이 감세정책이 1년간 지속될 경우 법인세는 약 1,640억 엔 감소할 전망이다.¹⁾

1) 時事通信(2021), 「賃上げ税制、減収1640億円 来年度改正、分配戦略の柱」, 12月23日, <https://www.jiji.com> (검색일: 2022.1.19).

일본 : 임금인상 실시·예정 기업 전년대비 0.8%p 감소

2021년 11월 19일 후생노동성은 2021년 「임금인상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인 평균임금을 인상했거나 인상할 예정인 기업은 전체 기업의 80.7%(전년 81.5%)로, 전년대비 0.8%p 하락했다. 또 1인 평균임금을 삭감했거나 삭감할 예정인 기업은 1.0%(전년 2.1%)였으며, 임금개정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은 10.1%(전년 9.5%)였다.

1인 평균임금의 개정액은 4,694엔(전년 4,940엔), 개정률은 1.6%(전년 1.7%)으로 개정액과 개정

률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한편 정기승급의 유무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면, 관리직과 관련해 정기승급제도가 있다는 기업의 비율은 73.0%(전년 76.8%), 없다는 기업은 25.5%(전년 21.7%)였다. 일반직의 경우, 정기승급제도가 있다는 기업이 81.6%(전년 82.5%), 없다는 기업이 16.9%(전년 16.1%)였다. 관리직과 일반직 모두 정기승급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이 약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¹⁾

1)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2), 「賃金引き上げ実施・予定企業は前年比0.8ポイント減少の80.7%—厚労省調査」, 『ビジネス・レパートレンド』, 2022年1月号, <https://www.jil.go.jp> (검색일: 2022.1.19).

브라질: 유력 대선 후보 룰라, “2017년 노동개혁 재논의” 언급

2022년 10월에 치러질 대선 결과에 따라 브라질 노동정책에 전면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노동당 소속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전 대통령은 1월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총리가 추진한 신노동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브라질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¹⁾ 다시 말해, 브라질에서 2017년 미셸 테메르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Reforma Trabalhista, Lei 13.467/2017)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당이 노동법 재개정 여부를 대선의 핵심 노동 공약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룰라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노동 전문가들도 스페인 사례에 관심을 가지며 브라질의 노동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전 노동부 장관이자 노동당 소속 루이즈 마링유(Luiz Marinho)는 스페인 사례를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 노동시장과 사회 특성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며, 대선에서 노동 권리 회복을 주요한 기치로 삼자고 발언했다.²⁾

이에 대해 노동계도 즉각 반응을 보이며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브라질을 대표하는 6개 노총 조직은 스페인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브라질도 2017년 실시된 노동개혁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으며, 실업과 불안정 고용의 증가, 소득 감소를 가져온 노동개혁 폐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³⁾ 아울러 노총 조직과 룰라 전 대통령

은 스페인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브라질을 방문한 스페인 사회노동당 및 노총 대표들과 1월 11일 만남을 가졌다.⁴⁾

이처럼 새해 초부터 브라질을 뜨겁게 달군 스페인의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말 스페인 정부는 2012년에 마리아노 라조이 브레이(Mariano Rajoy Brey) 우파정부가 실시했던 노동개혁의 일부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신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고 초기업 단위의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하는 등 노조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 같은 조치는 중도좌파 사회노동당과 좌파정당 포데무스가 2019년 연립정부 구성 이후 추진한 정책 중 하나로, 2021년 약 9개월 동안 스페인 정부와 양대 노총(CCOO, UGT) 및 사용자단체(CEOE, CEPYME)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낸 성과였다. 스페인 정부는 2021년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합의안을 토대로 임시 조치를 발표하고 법안을 의회에 넘겼다. 신노동법안은 2022년 2월 3일 의회에서 찬성 175표, 반대 174표의 단 한 표 차이로 통과되어 2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정규직 사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을 장려하면서 임시직의 계약 기간이 4년에서 6개월로 제한되고, 단체교섭을 통해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일, 주, 월 단위로 체결하는 간헐적 계약을 폐지하며, 아웃소싱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한다.⁵⁾



- 1) PT(2022), “Lula e Gleisi destacam revogação da reforma trabalhista na Espanha”, Janeiro 5, <https://pt.org.br> (검색일 : 2022.1.9).
- 2) Rede Brasil Atual(2022), “Revisão da ‘reforma’ trabalhista será feita de forma ‘pactuada’, diz Marinho”, Janeiro 10, <https://www.redebrasilatual.com.br> (검색일 : 2022.1.11).
- 3) CUT(2022), “Reforma trabalhista retirou direitos e gerou desemprego”, *CUT notícia*, Janeiro 12, <https://www.cut.org.br> (검색일 : 2022.1.12).
- 4) Turra, J.(2022), “Sim, Lula deve revogar a reforma trabalhista de Temer”, *O Trabalho PT*, Janeiro 12, <https://otrabalho.org.br> (검색일 : 2022.1.14).
- 5) De Souza, P. D.(2022), “Espanha revoga reforma trabalhista que precarizou trabalho e não criou empregos”, *Brasil de Fato*, Janeiro 3, <https://www.brasiledefato.com.br> (검색일 : 2022.1.12).

브라질 : 카이샤 은행장, 직장 내 도덕적 괴롭힘으로 조사받아

브라질 국영은행 중 하나인 카이샤 이코노미아 페데라우의 2021년 송년회에서 페드로 기마라에스(Pedro Guimarães) 은행장이 임원 및 직원들에게 도덕적 괴롭힘을 자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직원이 촬영하여 언론을 통해 퍼뜨린 동영상에서 은행장이 송년회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집단 팔굽혀펴기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노조(Contraf-CUT)는 은행장이 직원들을 조롱하고 굴욕감을 주었다며 카이샤 은행에 공문을 보내 항의했으며, 은행장의 감질을

조사해 달라고 노동검찰에 통보했다. 이에 조사에 나선 파울로 네토(Paulo Neto) 노동검사는 은행장이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신체 폭력을 가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 도덕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한 행정 및 사법 조치를 통해 처벌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¹⁾ 물의를 빚은 페드로 기마라에스는 2019년 파울로 게지스(Paulo Guedes) 경제부 장관이 발탁한 친보우소나루 계열 인사로 분류된다.

1) Rede Brasil Atual(2021), “Bancários vão denunciar presidente da Caixa ao Ministério Público do Trabalho”, Dezembro 17, <https://www.redebrasilatual.com.br> (검색일 : 2022.1.17).